



1980年代 한국에서의 차별적 교육 해소 주장의 재음미 : 교육기회 평등의 관점에서

金, 聲烈

(Citation)

韓国における教育機会平等保障の主張と運動 : 韓国教育学会キム ソンヨル前会長の論考をもとにした対話

(Issue Date)

2022-07-03

(Resource Type)

conference object

(Version)

Accepted Manuscript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9454>



1980年代 한국에서의 차별적 교육 해소 주장의 재음미 : 교육기회 평등의 관점에서

金聲烈

(慶南大學校 名譽碩座教授/ 前 韓國教育學會長)

Contents

1. 서론
2. 무상의무교육의 확대 실시 주장과 교육기회 불평등의 축소 정책의 추진
3.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보조 주장과 공정한 교육기회의 보장 정책의 추진
4. 도·농간 교육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재정배분방식의 도입 주장과 지역간·학교간 교육형평성 제고 정책의 추진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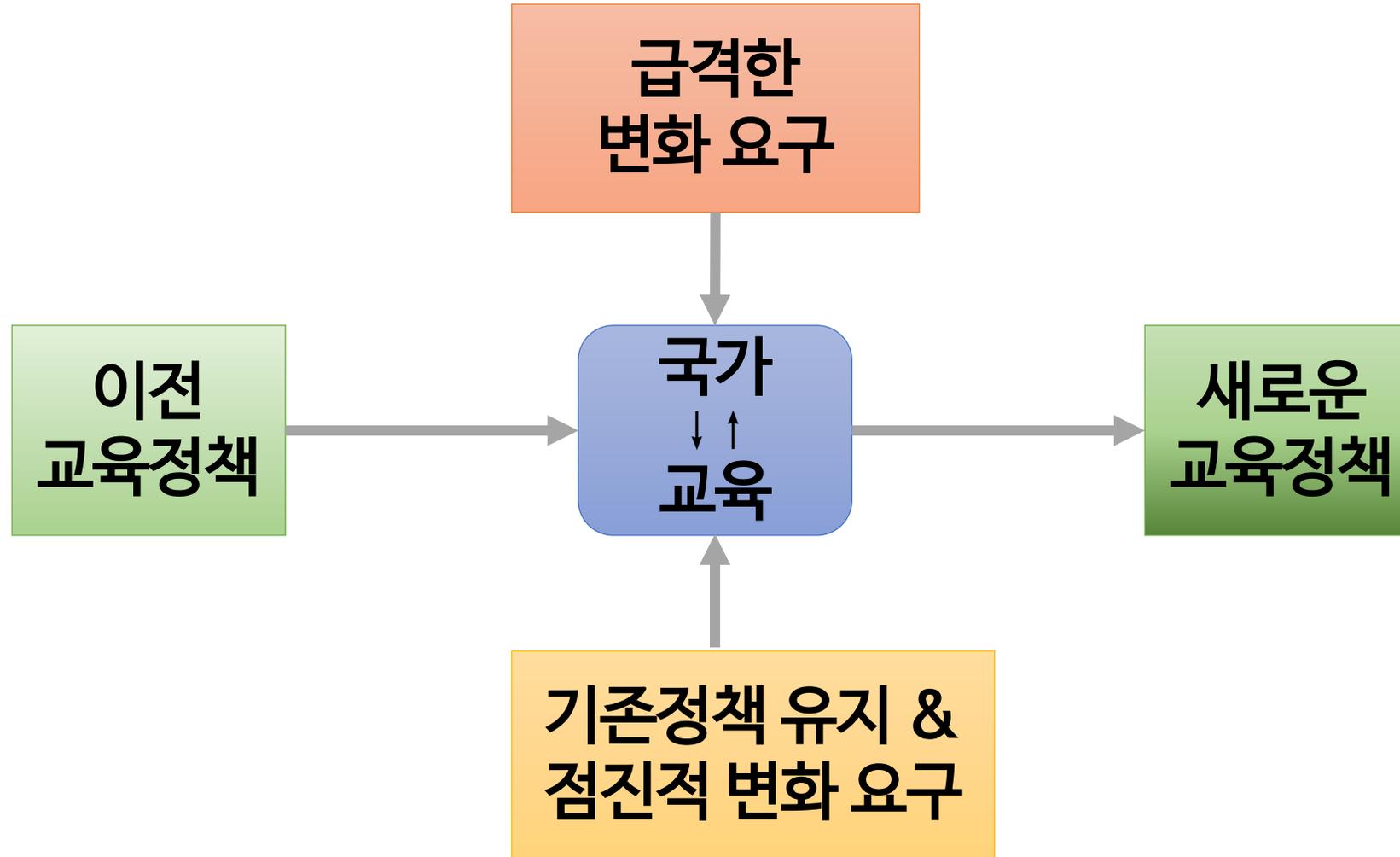
1980년대 한국에서의 차별적 교육 해소 주장의 재음미

1. 서론

1. 서론

- 한국의 교육정책을 변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가 사회운동세력의 정책 주장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함
 - 1980 년대에 교육운동 세력은 ‘차별적 교육(불평등한 교육)을 해소하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정책 주장들을 제기
 - 이는 1980 년대 이후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고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촉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80년대 한국사회의 교육운동세력이 제기하였던 차별적 교육(불평등한 교육) 해소 주장이 그 이후에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정책들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2020년대 오늘날에 지니는 의미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1. 서론



1980년대 한국에서의 차별적 교육 해소 주장의 재음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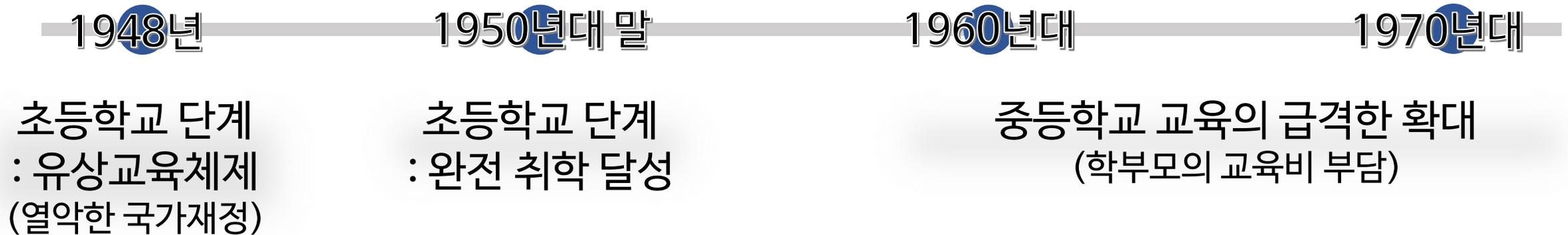
2. 무상의무교육의 확대 실시 주장과 교육기회 불평등의 축소 정책의 추진

2. 무상의무교육의 확대 실시 주장과 교육기회 불평등 축소 정책의 추진

■ 무상의무교육: 일정 수준의 교육을,

- ① 모든 국민을 대상
- ② 취학을 법으로 강제
- ③ 개인이 교육비를 내지 않도록 국가가 소요경비를 부담

■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1948-1970年代)



2. 무상의무교육의 확대 실시 주장과 교육기회 불평등 축소 정책의 추진

- 1980년대 교육운동세력은 부분적인 유상교육체제로 인하여 의무교육단계에서조차도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에서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 대한민국 정부의 학교교육 **무상교육화 정책**
 - 대한민국 헌법(1948.7.17) :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천명, 그러나 현실은 유상교육체제
 - (1972년 개정)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화
 - 초등학교 의무교육 무상화: 도서벽지 지역(1972) →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1979년) → 6대 도시 지역 순으로 무상교육을 완성(1997년)
 - 중학교 의무교육 무상화: 도서벽지 지역(1985년) → 시 지역(2004년)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무교육 아님): 2019시작하여 2021년 전면 실시

2. 무상의무교육의 확대 실시 주장과 교육기회 불평등 축소정책의 추진

■ 대한민국 정부의 유아교육(의무교육 아님)

- 1999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가정의 만 5세 유아에 대하여 유치원 교육비와 보육시설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
- 2002년: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으로 확대
저소득층 가정의 만 3, 4세 유아에 대한 교육비와 보육료에 대해 지원
- 2012년: 『누리과정』 시행 → 만 3세 ~ 5세 유아의 무상교육·보육 완성
 - 만 5세 유아교육·보육비 지원(2012)
 - 3,4세 교육·보육비 지원(2013)

2. 무상의무교육의 확대 실시 주장과 교육기회 불평등 축소 정책의 추진

-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교육을 무상화한 다양한 정책은,**
 - 헌법정신의 구현과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교육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 한국사회의 교육운동 세력들의 무상의무교육 확대 정책 주장들에 의하여 촉진되었음
 - 또한 경제성장으로 증대된 정부의 재정역량에 의하여 가능하였음(한국정부는 최고로 많을 때는 국가예산의 20% 수준을, 현재는 16% 내외를 교육예산으로 하고 있음.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1972년 제정하여 내국세의 일정 비율(2022년 현재 20.79%)을 시·도 교육청에게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하고 있음)

3.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보조 주장과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추진

3.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보조 주장과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추진

- 소득계층 간에는 **교육비 부담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존재**
 - 1980년대 교육운동세력은 교육비 부담능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소득계층간 교육에의 접근 기회의 격차와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
 - 교육의 과정에서의 불평등 →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데 불리함을 초래 → 대학입학기회의 계층간 불평등
- **교육운동세력은 불평등해소방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제도’ 주장**
- 1980년대 교육운동세력이 제기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주장은 정부에 의하여 1980년대에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됨

3.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보조 주장과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보조 정책

- 1982년 말 개정된 「생활보호법」에 교육보호 조항 법제화
 - 교육보호 : 보호대상자에게 수업료 기타 보호금품 지원
 - 교육보호 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학생 → 고등학생까지 확대(1998年)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 2의 제①항)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3.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보조 주장과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비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 사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학비지원 사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되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
-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 정부의 교육비 지원제도

:불리한 계층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함

**4. 도·농간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한
재정배분방식의 도입과
지역간·학교간 교육형평성 의제고 정책의 추진**

4. 도·농간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한 재정배분방식의 도입주장과 지역간·학교간 교육행평성 제고정책의 추진

- 농촌의 교육환경이 도시보다 열악함은 도시와 농촌의 학교 간에 교육격차를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
 - 1980년대 교육민주화 운동세력은 도시와 농촌 간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 교육여건의 차이에 주목
 - 도시의 아이들에 비하여 교육과정상에서 불평등한 교육
 - 열악한 농촌의 교육시설
 - ▶ "농촌의 학교에 교육재정을 더 많이 할당하는 재정배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4. 도·농간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한 재정배분방식의 도입주장과 지역간·학교간 교육행평성 제고정책의 추진

- **교육운동세력의 문제의식은 지방교육재정 배분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 지방교육재정배분에 사용하는 산식은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요소별로 도시와 시골의 유·불리함을 따져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존재
 - 농촌지역을 포함한 도지역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존재
- 정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정책추진(2000년대)**
 - 지역간, 학교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교육운동세력과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 정도 惡化에 따라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곤층 확대
 - 소득과 학력에 따라 지역 내 거주지 분화가 발생하고, 특정 학교에 취약계층이 밀집하는 **학교별 계층 분화 현상**이 발생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 취약계층 밀집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 문화, 복지 통합 지원망을 구축하는 사업
 - 노무현 정부(2000.2-2007.2)에 도입 → 이명박정부(2007.2-2012.2)까지 계속
 - 박근혜정부(2013.2-2017.5): 사업명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 → 문재인정부(2017.5-2022.5)까지 이어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역 사업의 차이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 광역자치단체의 동(洞) 지역을 단위로 하여 학교를 선정했다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밀집한 학교를 단위로 하였다는 점
-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될 예정

4. 도·농간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한 재정배분방식의 도입주장과 지역간·학교간 교육행평성 제고정책의 추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성과

-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에의 접근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등한 교육 여건에서 공부하고, 취약한 계층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교육성취를 향상시킴으로써 교육결과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적극적 의도에서 출발
 - 성과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음

★사업의 한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전체 교육소외계층보다는 교육소외계층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 수준의 학생에게 한정되어 나타남”

“상위 수준의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에게는 인지적·비인지적 영역 모두에서 교육적 성취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1980년대 한국에서의 차별적 교육 해소 주장의 재음미

5. 결론

5. 결론

- 한국에서 1980년대 교육운동 주도세력이 제기하였던 차별적 교육해소 주장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
 - 차별적 교육 해소 주장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반영하고 대변한 것
 - 한국정부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 첫째, 학교교육에의 접근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
 - 둘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비 지원 정책을 제공
 - 셋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등 시행
- ➔ 대한민국 헌법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평등권, 무상의무교육의 원칙,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교육기회 균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

5. 결론

- 정부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은,
 - 한국인의 교육기회 평등에 대한 정서와 사고, 교육운동세력의 주장들에 의하여 촉진
 -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의 국가재정역량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
- 2010년대 교육운동세력의 ‘대학의 반값 등록금’ 주장과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
 - 교육에의 접근기회를 평등하게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여건 등 교육과정상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며, 교육결과의 격차를 축소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의 논리와 일맥상통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usykim@kyungnam.ac.kr / kusykim@naver.com